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의향

- 경제적·문화가치관·지역적 변수의 영향 분석 -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전 지 혜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의향

- 경제적·문화가치관·지역적 변수의 영향 분석 -

지도교수 류 근 관

이 논문을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전 지 혜

전지혜의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원장 김 대 일 

부위원장 류 근 관 

위원 김 영 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경제적, 문화가치관, 지역적 특성이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지만 20-40세 기혼여성 76,385명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빗 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문화가치관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별 변수가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실업률은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는 미미하지만 미취업여성과 취업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라 각 독립 변인들이 추가 출산의향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은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남편의 소득이나 지역별 실업률 등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여성의 경우 임금근로 여부에 따라 의향의 차이를 보였으며, 보육시설 공급률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취업여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취업 여부 및 지역별 특성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여성의 취업여부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들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출산의향, 기혼여성, 취업, 지역적 특성, 센서스
학 번: 2010-20190

목 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 동기	1
1-2. 연구 의의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2-1. 경제학적 접근	4
2-2. 문화가치관 접근	6
2-3. 지역적 접근	7
제 3 장 데이터 및 기술통계량	10
3-1. 분석자료	10
3-2. 기술통계량	11
제 4 장 연구방법 및 변수설명	14
4-1. 연구방법	14
4-2. 변수설명	16
제 5 장 분석결과	20
5-1. 취업여부에 따른 추가 출산의향	20

5-2. 경제적·문화가치관 변수의 영향 분석	21
5-3.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남아선호사상의 관계	26
5-4. 경제적·문화가치관·지역적 변수의 영향 분석	27
제 6 장 결론 및 함의	31

표 목차

<표 1> 변수의 기술통계량	11
<표 2> 취업여부에 따른 추가출산의향	15
<표 3> 경제적·문화가치관 변수의 영향 분석	21
<표 4> 부모와의 동거와 남아선호사상의 관계	25
<표 5> 경제적·문화가치관·지역적 변수의 영향 분석	27
<표 6> 경제적·문화가치관·지역적 변수의 영향 분석	29

(취업여부별로 가중치를 부과한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 사용)

제 1 장 서론

1-1. 연구 동기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회 흐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당 1.24명인데, 이는 대체출산율인 1인당 2명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특히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이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축소시키고,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만혼, 높은 교육열로 인한 자녀 양육비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고용 환경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Ermisch, 1988; 박상미, 2007에서 재인용).

이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출산율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고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에 기인한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즉,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출산을 둘러싼 기회비용, 인적자원, 직접비용 등의 제반 요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문정, 2003) 및 성 역할에 대한 태도(김혜원, 1997) 등에서도 차이가 나게 된다(정혜은·진미정, 2008에서 재인용). 즉,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출산 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었다(공선영, 2006; 정혜은·진미정, 2008).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조명되고 있는 저출산 흐름은 취업여성뿐만 아니라 미취업여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미취업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1.63명, 취업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51명으로 두 집단 모두 출산율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취업여성뿐만 아니라 미취업여성의 출산행위를 공히 고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기혼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기혼여성을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출산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문화적 특성 및 거주지역의 특성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Hirschman and Guest, 1990; Billy and Moore, 1992; Hank, 2002; 박상미, 2007). 또한 경제적 특성 또는 문화가치관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이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기존 연구(박상미, 2007)가 있으나,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하여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의향에 미치는 경제, 문화가치관, 지역적 특성을 모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혼여성을 취업 여부로 구분하여 각 취업여성 및 미취업여성이라는 집단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의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연구로는 처음으로 전국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문화가치관·지역적 접근방법을 통합한 관점에서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출산에 관한 기존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관련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심도 있고 넓은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상미(2007)의 연구에서 지역별 변수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설정하여 대표성 측면에서 지적될 만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저출산의 흐름 및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함과 동시에 대표성을 띠게 하기 위해 내실을 기하였다.

둘째, 보육시설의 정원을 토대로 만든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만 0세에서 4세까지의 인구 수 대비 보육시설의 수를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로 사용하였다(박상미,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만 0세에서 4세까지의 인구 대비 해당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정원을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보육시설마다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시설 수는 각 지역 아동들의 실질 보육시설 이용률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사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전체 기혼여성을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제로 분석결과, 취업여부에 따라 각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차후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의 자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본 연구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경제학적 접근

출산율 저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1960년대부터 많은 국가에서 수행되어 왔다. 사회학, 인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론, 실증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학적 측면에 근거한 이론 연구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Becker(1960, 1965)는 자녀는 부모의 효용함수를 최적화시키는 정상재라고 설정하고 부모가 주어진 소득 제약 하 효용함수를 만족시키면서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자녀의 수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이론은 각 가구는 자녀의 수, 자녀의 질, 다른 재화의 소비로 효용을 얻으며 효용함수에는 부모의 인종, 종교, 가치관 등이 반영됨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 이 때, 부모는 자녀의 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질도 선택하는데, 자녀의 수와 질은 대체재이다. Quantity and Quality Tradeoff 모형에 의하면 소득의 증가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며 자녀의 수는 부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확장되었으며,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에서는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신가계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부모는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Esterlin, 1975). 이때, 각 가구에는 소득제약식과 시간제약식이 존재하며 가구의 소득은 남편의 소득, 여성의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아울러 여성의 시간에 대한 예산제약식이 함께 존재한다(Willis, 1973; Lundholm and Ohlsson, 1998). 이는 자신의 시간을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간, 여가시간으로 구성되며 여성은 자신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 사용할 것인지, 노동시장에서 보내는데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배를 결정한다. 이때, 여성의 시간의 가격은 자녀에 대한 잠재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녀의 잠재가격이 시간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Willis(1973)에 따르면 자녀는 기타 재화에 비해 시간 집약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잠재가격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수와 질이 감소한다. 시간의 잠재가격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그 결과 시간의 잠재가격, 즉 임금이 증가하면 자녀의 상대가격이 높아지고, 여성의 자녀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자녀의 상대가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부모가 출산하려는 자녀의 수 또는 질이 감소하게 된다. Willis(1973)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와 남편과 아내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 따라 자녀에 대한 수요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자녀가 다른 재화에 비해 여성의 시간을 집약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시간의 가격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자녀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여성의 시간의 가격인 임금이 달라지고 이는 자녀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연구(Butz and Ward, 1979)도 존재하고 있다. 취업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출산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Walker(1995)은 여성은 출산의 잠재가격과 출산으로 인한 효용을 고려하여 출산을 결정하고 출산의 잠재가격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 경력의 단절로 인하여 인적자본에 투자하지 못하여 손실된 소득, 출산 및 양육에 실제 들어가는 시간과 금전적 비용이 됨을 역설하였다.

한편, 임금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참여할수록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더 오랜 기간 경력을 쌓으면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잠재적 임금이 높아지는 인과적 흐름에 기인한다(Walker, 1995). 반면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인적자본의 투자가 어려

워지고 이는 잠재적 임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며, 필연적으로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을 상승시키고 자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감소시킨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따라서 여성은 취업여부에 따라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의 영향력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인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이문정, 2003, 정혜은·진미정, 2008).

2-2. 문화가치관적 접근

비용과 효용관점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경제학적 접근과는 다른 사회학, 인류학에서의 관점은 문화가치관 접근으로 대변될 수 있다. 이는 경제학적 접근과는 다르게 규범과 기호의 형성을 통한 행동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규제적인 면을 강조하며(김한곤, 1993; 정혜은·진미정, 2008), 출산력이 출산에 대한 무의식적인 규제와 의식적인 규제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출산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없으며, 결혼에 대한 규범, 자녀의 가치와 선호 양자의 관행들이 출산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이며 (권태환, 김두섭; 1990), 가치관 및 문화와 행위자의 행동 간에는 분리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정혜은·진미정, 2008).

우리나라에서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 양육에 대한 보조의 기능(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정혜은·진미정, 2008 인용)과 추가 출산에 대한 심리적 압박(Kwon, 1984; 김정석, 2007; 김현식·김지연; 2012)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부모가 양육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김태현 외, 2006; 김현식·김지연, 2012), 가족의 연속

성과 부계적 가치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예비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빨리 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므로 여성의 부모는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현식·김지연, 2012).

도시에 거주하는지 여부 또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가치관 요인이 된다. 이는 사회가 점차 도시화됨에 따라 자녀를 노후 안정의 수단으로 생각하던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점차 핵가족 제도로 변화되는 사회, 인식적 변화에 기인한다(이영주, 1988; 이삼식, 2006). 또한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퍼져 가족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못지않게 개인의 자아실현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Robinson, 1963) 이러한 인식 역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을 받아 왔다. 남아선호사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아들이 노후 대책이 된다는 심리적인 안정감 둘째, 아들이 가문을 계승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김일현 외, 1990, Larsen, Chung, Gupta, 1998; 권태현 외, 1993; 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정혜은·진미정, 2008). 그러나 최근에는 남아선호사상의 강도가 약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성용, 2003). 이러한 사상 역시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문화가치관 접근에서 해석할 수 있다.

2-3. 지역적 접근

최근에는 경제학적, 문화가치관 접근 이외에 지역적 접근 방식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지역적 접근의 관점에 따르면 개개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영향을 받고, 이를 자신의 출산 선택에 반영한다(Hirschman & Guest, 1990; Billy & Moore, 1992; Hank, 2002).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여성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거주 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동 시장 구조, 지역의 인구 구조,

자녀 보육 시설 구조 등이 여성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Stolzenberg and Waite, 1984; Billy and Moore, 1992; Kravdal, 1996; Brewster and Rindfuss, 2000; Kreyfeld and Hank, 2002).

여성은 직접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자녀의 양육 서비스를 구매하여 보육서비스에 자녀를 맡길 수도 있다(Jonh and Ermisch, 1990). 시장에서의 순 이익이 보육시설의 비용보다 크다면 여성은 노동공급에 제약을 받지 않고 보육시설로 육아를 대체하게 되므로 출산과 노동공급에 대한 제약이 감소한다. 시장에서의 보육서비스의 가격이 증가하면 여성의 자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순 임금이 감소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비용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출산율 또한 감소하게 된다.(Lundholm and Ohlsson,1998; Blau and Robins,1989).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여성이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더라도 자녀양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의 보육시설 공급률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유인이 증가하고, 양육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여성의 시간 제약을 완화시켜 출산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장치를 통해 여성의 경력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인 임금 하락의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기간이 길수록 기회비용은 작아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이용으로 취업여성이 유료로 구매하는 보육서비스가 여성의 임금보다 낮을 경우 출산의 기회비용이 낮아진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쉽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자녀 수요가 증가하고 출산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Stolzenberg and Waite, 1984; Hank, 2002; Rindfuss, Guilkey, Morgan, Kravdal and Guzzo, 2007; 박상미, 2007).

한편 지역별 실업률은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 즉,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낮다면 노동시장에 참가할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노동시간의 증가하고 이는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여성은 자녀를 감당할 만한 소비재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여성의 출산의향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지역별 실업률이 낮으면 여성의 노동참가 기회가 증가하게 되고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출산의향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Brewster and Rindfuss, 2000; Hank, 2002; 박상미, 2007)

Blossfeld(1987) 와 Hank(2002)는 지역의 사회적 특색이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의 출생의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지역의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지역의 실업률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역별 실업률은 외생적인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낮다면 노동시간의 증가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여성은 자녀를 감당할만한 소비재라고 생각하게 되므로 따라서 출산의향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지역별 실업률이 낮으면 여성의 노동참가 기회가 더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여성의 출산의향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박상미(2007)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별 변수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변수 중 해당 지역의 아파트 공급률 변수 이외에는 추가 출산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데이터 및 요약통계량

3-1. 데이터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마이크로샘플데이터 b형(이하 센서스)을 사용하였다. 센서스 자료에는 총 316,536가구, 892,009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출산 행동에 대한 연구가 주 목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센서스 자료를 가구별 자료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이면서 성별은 여성인 가구원의 자료만 추출하고, 이후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이면서 성별은 남성인 가구원의 자료만 추출하였다. 가구주의 자녀와 가구주의 부모 또는 시부모의 자료도 따로 추출하여 각각의 과정을 거쳐 추출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가구별 자료를 생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별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거주지가 적어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하며, 본 연구의 목적상 여성의 취업여부로 대상을 두 분석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많은 표본이 요구된다고 생각되었으며, 센서스 자료는 이러한 점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료로 판단되었다. 즉, 이를 이용하면 개인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시군구단위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센서스 자료에는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개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학력수준을 소득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정확한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의 출산패턴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출산의 기회비용인 임금을 통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제8차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지역별 변수의 경우 실업률 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시도별

실업률 변수를 사용하였다. 지역의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5년, 2009년 보건통계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더욱 부합시키기 위하여 추가출산계획이 실제로 출산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연령의 여성을 설정하여, 센서스의 만 20세~40세의 기혼여성 77,63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미취업여성이 47,634명, 취업여성이 30,0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량

<표 1> 변수의 기술통계량

	미취업여성		취업여성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종속변수				
추가 출산의향	0.220	0.414	0.222	0.415
통제변수				
연령	33.50	4.224	34.29	4.231
결혼연령	25.09	3.137	24.78	3.244
경제 변수				
교육수준	13.21	1.91	13.28	2.13
남편의 소득	264.71	88.12	265.45	85.84
본인의 소득			137.34	74.83
임금근로자 여부			0.692	0.462
문화가치관 변수				
자녀 수	1.65	0.79	1.56	0.88
아들 유무	0.655	0.475	0.614	0.486
부모와 동거여부	0.061	0.240	0.112	0.315
거주지 도시여부	0.847	0.359	0.812	0.390
지역 변수				
보육시설 공급률	0.066	0.117	0.07	0.120
실업률	3.742	0.905	3.69	0.945

분석을 위한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상기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의 전체 대상 중 취업여성은 38.6%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추가 출산의향 비율을 원하는 여성은 취업여성 집단과 미취업여성 집단 모두 22%로 그 차이가 거의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여성의 연령은 취업여성이 0.8세 높게 나타났다으며, 전체 집단의 평균 결혼연령은 만 24.97세로 나타났는데 취업여성보다 미취업여성이 0.8세 높았다.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미취업여성 남편의 소득보다 취업여성 남편의 소득이 4만원 정도 높게 관찰되었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월평균소득은 월 134만원 정도로 크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의 수는 미취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아들의 수와 딸의 수가 각각 0.12명, 0.07명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자녀수는 미취업여성이 1.65명, 취업여성이 1.56명으로 미취업여성이 약 0.9명 많은 것으로, 미취업여성이 아들이 있는 경우가 취업여성의 경우보다 약 4%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여부는 취업여성이 미취업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여부는 미취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4% 높게 나타났다. 도시 거주 여부는 미취업여성이 취업여성보다 4%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 모두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률은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에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지역별 만 0세에서 4세까지의 아동 1인당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은 약 0.07명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복지 선진국에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별 실업률은 평균 3.7%인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의 실업률 또한 집단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연구방법 및 변수설명

4-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된 두 분석대상 집단별로 독립변수들이 추가 출산의향에 어떻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빗 모형을 분석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프로빗 모형은 종속변수가 1 또는 0의 값을 가지는 이산형 모형인 경우에 사용하는데,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녀 추가 출산의향이 있다/없다의 이산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빗모형은 연계함수로 누적정규분포의 역함수를 차용하여 누적정규분포를 가정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Y^* = X'\beta + \epsilon, \text{ where } \epsilon \sim N(0,1)$$

$$Y = 1_{Y^* > 0} = \begin{cases} 1 & \text{if } Y^* > 0 \text{ i.e. } -\epsilon < X'\beta \\ 0 & \text{otherwise} \end{cases}$$

$$\Pr(Y=1|X) = \Phi(X'\beta)$$

$$\Pr(Y=0|X) = 1 - \Phi(X'\beta)$$

Y에 해당하는 종속변수는 여성이 추가자녀에 대한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나타난다. X에 해당하는 설명변수는 여성의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요인, 그리고 지역적 요인 등을 투입하였다.

4-2. 변수의 설명

1. 종속변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조사 표본조사표에 제시된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문항에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 출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없다’라고 대답한 경우를 출산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를 실제출산자녀수가 아닌 출산의향을 사용하는 것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보육시설의 공급률과 출산행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실제 출산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독립변수 간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의 높은 수요로 인해 보육시설의 공급률이 높아지는 역-인과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의향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게 된다면 출산의향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보육시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록 추가 자녀 출산 계획 여부에 대한 설문문항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계획대로 출산이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만, 적어도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상기 요인들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정혜은·진미정, 2008; 김종백·유은영, 2010 인용).

출산계획이 반드시 출산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는 피임 등이 발달하여 출산에 대해 스스로 조절할 후 있기 때문에 출산계획은 실제 출산행위를 전망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Mitchel and Gray, 2007; 서미정, 2010, 김종백·유은영, 2010)는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출산 의도가 상당히 후속출산 행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 Pasta, 1995; Thomson, 1997; Schoen et al., 1999).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계획하지 않은 임신 및 출산이 포함된 수치인 합계출산율이나 완결출산율 등 결과로서의 출산율보다는 출산의향이 개인의 선택의 관점에서 출산행위를 설명하기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정혜은·진미정, 2008; 박상미, 2007).

2.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

먼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성의 연령과 여성의 결혼연령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령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이라고 가정 하에 연령의 제곱 변수도 투입하였다.

1) 경제적 특성 변수

출산에 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남편의 소득, 여성의 소득, 여성의 교육수준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녀를 정상재라고 간주한다면 남편의 소득에 따라 자녀에 대한 수요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의 수에 대한 소득탄력성과 자녀의 질에 대한 소득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추가 출산의향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여성의 소득은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나타내므로 출산의 잠재적 가격을 반영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소득의 증가가 출산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여성의 소득에 대한 변수를 투입하였다. 남편과 여성의 소득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변수를 이용하여 KLIPS 제 8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소득 변수는 자연대수 로그변환을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여성이 교육을 받은 총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이를 투입하였다.

취업여성의 경우 임금 근로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그 이유는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종에 따라서 노동의 유연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Rindfuss and Brewster, 2000).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6)에 따르면 실제로 여성의 파트타임 업종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노

동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출산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도 이러한 노동 유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이 출산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노동 시간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의 출산의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문화가치관 특성 변수

한편 문화가치관 특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들유무, 자녀 수, 부모와의 동거여부, 도시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자녀 수를 고려한 이유는 현재 자녀의 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출산으로부터 오는 효용이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이유는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고 할 때, 기존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추가적인 출산의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전통으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아들의 존재가 추가 출산의향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친정부모 및 시부모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두 가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하였다. 부모와의 동거가 출산에 미치는 첫 번째 경로는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부모가 추가 출산을 하도록 여성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양육 보조자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부모와 동거를 하게 되면 자녀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자녀를 대신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또한 남아선호사상과 부모와의 동거의 관계가 추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와 부모와 동거하

면서 아들이 있는지에 대한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와 동거 시 남아선호사상이 더욱 커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즉, 부모와 동거할 경우 기혼여성의 부모가 태어날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출산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인지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남아를 더 낳으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고려한 것이다.

3) 지역별 특성 변수

한편 지역별 특성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시설의 접근성의 증가가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어 출산의향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시군구별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률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별로 만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 한 명당 국공립보육시설의 정원을 자연대수 로그변환을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던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는 보육시설의 수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수보다는 보육시설의 정원이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더 잘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의 정원 대비 해당 지역 아동의 인구 수를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로 사용하였다. 더욱이 세부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하고 시군구 단위로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지역별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건통계 책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9년 이후부터 시군구 단위로 보육시설 비율이 조사되었으므로, 2005년의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바, 본 연구에서는 2009년의 시군구 단위의 국·공립보육시설비율을 사용하여 2005년 시군구 단위의 국·공립보육시설비율을 추정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때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시군구 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비율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다.

거주 지역이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여부 또한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 여부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도시는 특히 지역에 따른 문화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자녀로 인한 효용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수요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Robinson, 1963)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농어촌보다 개인주의 가치관이 더욱 확산되어 있으며 핵가족 제도가 더욱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산의향이 낮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별 실업률 변수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만약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낮다면 노동시간의 증가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은 자녀를 감당할만한 소비재라고 생각하고, 출산의향이 증가하게 된다(Blossfeld, 1987; Hank, 2002). 반면 지역별 실업률이 낮으면 여성의 노동참가 기회가 더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여성의 출산의향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별 실업률이 위의 두 가지 경로 중 어느 경로를 통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실업률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2005년에는 시군구 단위로 실업률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 실업률 변수는 시군구별 변수가 아닌 시도별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 시군구내에서 보다는 인접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도별 실업률 변수를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 5 장 분석결과

5-1. 취업여부에 따른 추가 출산의향

<표 2> 취업여부에 따른 추가출산의향

변수	전체 여성	
	한계효과	표준오차
연령	0.078***	(0.004)
연령제곱	-0.930***	(0.000)
결혼연령	0.049***	(0.000)
경제적 변수		
여성의 교육수준	0.010***	(0.001)
남편의 소득	0.003*	(0.002)
여성의 취업여부	-0.017***	(0.003)
문화가치관 변수		
자녀 수	-0.120***	(0.002)
아들유무	-0.050***	(0.003)
부모와 동거여부	0.012***	(0.004)
도시여부	-0.023***	(0.003)
N	77,638	77,638

- 주: 1. 추정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2.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 수 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는 표준편차 한 단위 증가했을 때에 대한 값으로 나타냄.
 3.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표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이 취업한 경우 추가 출산의향이 1.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노동참가로 인한 경력 단절, 임금 손실과 같은 기회비용이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행위는 시간 집약적이므로 경제 활동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은 출산의향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임금은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의 단절이 발생하면 노동시장에서 잠재적 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Leibenstein, 1975; Walker, 1995; Brewster and Rindfuss, 2000; 정혜은·진미정, 2008).

5-2. 경제적·문화가치관 변수의 영향 분석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계효과 결과는 연령, 결혼연령, 남편의 소득, 여성의 교육수준, 아들의 수, 딸의 수, 부모와 동거여부, 도시여부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남편의 월 소득이 표준편차 한 단위 증가할수록 미취업 여성의 출산 의향은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한 남성과 여성의 소득은 모두 평생소득이 아닌 현재시점의 소득이며 설문 응답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입된 변수가 아니라 임금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된 변수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소득과 여성의 소득이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자녀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Becker의 가설이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여성에게만 성립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소득의 증가가 출산의향을 증가시키는

것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취업여성 집단에서만 소득과 추가출산의향이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미취업 여성의 경우 여성의 소득이라는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는 취업여성과 다르게 남편의 소득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이라

<표 3> 경제적·문화가치관 변수의 영향 분석

변수	미취업여성		취업여성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연령	0.075***	(0.005)	0.015***	(0.006)
연령제곱	-0.194***	(0.000)	-0.253***	(0.000)
결혼연령	0.046***	(0.001)	0.043***	(0.001)
경제적 변수				
여성의 교육수준	0.007***	(0.001)	0.014***	(0.001)
남편의 소득	0.005***	(0.002)	-0.001	(0.006)
여성의 소득			0.002	(0.003)
여성 임금 근로 여부			-0.012***	(0.005)
문화가치관 변수				
자녀 수	-0.126***	(0.003)	-0.106***	(0.003)
아들유무	-0.053***	(0.003)	-0.047***	(0.004)
부모와 동거여부	0.015**	(0.007)	0.004	(0.006)
도시여부	-0.024***	(0.004)	-0.022***	(0.005)
N	47,630	47,630	30,008	30,008

주: 1. 추정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2.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 수 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는 표준편차 한 단위 증가했을 때에 대한 값으로 나타냄.

3.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는 경제적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취업여성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여성의 양육환경, 가치관 등의 기타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출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정혜은·진미정, 2008). 따라서 취업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미취업여성보다 소득이 높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근거로 소득이라는 경제적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가 없어 소득수준이 증가했을 때 자녀의 질이 어떠한 관계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자녀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육비나 사교육비 등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여성의 소득이 자녀의 수와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는 해당 정보를 반영하는 변수가 없어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득이 출산의향(자녀의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수준이 출산의향에 큰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는 미취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이 자녀의 질에 직접적인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였을 경우 추가적으로 출산을 하기보다는 기존 자녀의 질에 더 투자를 할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즉,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 증가가 출산의향의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자녀의 질이나 다른 재화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는 것이다. 결국 남편의 소득은 추가 출산이 아닌 자녀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이 미취업여성에 비해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취업여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Heckman and Walker, 1995; 조병구, 2007; 민희철, 2008). 그러나 분석 결과, 여성의 임금과 추가 출산의향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인 Tasiran(1995)

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성 임금의 추정치는 생애 전체의 임금이 아닌 현재 시점의 임금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추가 출산의향은 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학업을 마친 이후로 출산 시기를 늦추게 됨에 따라 생물학적 가임기간 내에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취업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취업여성의 경우 취업으로 인해 출산을 미룬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Blossfeld and Huinink, 1991; Hank, 2002). 취업여성의 평균연령이 미취업여성보다 더 높은 반면 평균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은 취업여성이 가임기간 내에 목표한 자녀수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추가적으로 출산하고 싶다는 의향이 더 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미취업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출산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할 경우 미취업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은 1.5% 증가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 양육에 대한 보조의 기능(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정혜은·진미정, 2008)과 추가 출산에 대한 심리적 압박(김정석, 2007; Kwon, 1984; 김현식·김지연, 2012)이라는 두 가지 방향 중 심리적 압박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변수가 미취업여성에게만 유의하게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의 기능이 미취업여성에게 있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취업여성은 일반적으로 미취업여성에게 비해 자아실현이나 일에 대한 욕심 등의 가치관의 영향이 다소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이 부모의 심리적인 압박을 상쇄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부모와의 동거가 미취업여성에게만 출산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부모와의 동거가 여성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녀의 수는 추가 출산의향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의 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추가출산의향이 12.6% 감소했으며, 취업여성의 경우 10.6% 감소했다.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미취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의 추가출산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의 경우 아들이 있는 경우 추가출산의향이 5.3% 감소했으며, 취업여성의 경우 4.7% 감소했다. 이는 최근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졌다는 주장(이성용, 2003)과는 반대로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가치관은 미취업여성에게 다소 강한 것으로 보인다(권태현 외, 1993; 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정혜은·진미정, 2008)는 기존 선행연구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성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이 도시 지역에 살수록 출산의향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의 경우 도시지역에 살 경우 추가 출산의향이 2.2% 감소하였고, 취업여성의 경우 추가출산의향이 1.8% 감소하였다. 이는 김태현(2006),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6), 서문희(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도시에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더 넓게 퍼져 있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obinson, 1963). 또한 도시에 사는 여성들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자녀의 집에서 오는 효용이 자녀의 수에서 오는 효용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여성들이 농어촌에 사는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자녀의 집에 투자하기 때문에 출산의향이 더 낮을 수 있는 것이다.

취업여성의 임금근로자 여부는 추가 출산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여성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추가 출산의향은 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동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5-3.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남아선호사상의 관계

<표 4>에는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남아선호 사상의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4> 부모와의 동거와 남아선호 사상의 관계

변수	미취업여성		취업여성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연령	0.075***	(0.005)	0.015***	(0.006)
연령제곱	-0.194***	(0.000)	-0.253***	(0.000)
결혼연령	0.046***	(0.001)	0.043***	(0.001)
경제적 변수				
여성의 교육수준	0.007***	(0.001)	0.014***	(0.001)
남편의 소득	0.005***	(0.002)	-0.001	(0.006)
여성의 소득			0.002	(0.003)
여성 임금근로자 여부			-0.019**	(0.005)
문화가치관 변수				
자녀 수	-0.124***	(0.004)	-0.125***	(0.005)
아들유무	-0.051***	(0.004)	-0.045***	
부모와 동거여부	0.034***	(0.010)	0.014*	(0.009)
도시여부	-0.024***	(0.004)	-0.022***	(0.005)
아들유무*부모동거	-0.027**	(0.011)	-0.017	(0.011)
N	47,630	47,630	30,008	30,008

- 주: 1. 추정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2.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 수 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는 표준편차 한 단위 증가했을 때에 대한 값으로 나타냄.
 3.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들의 존재가 추가 출산의향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아들만이 조상에 대한 제사 등 문화적인 의식을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아들을 노후대책의 수단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Larsen, Chung, Gupta, 1998; 권태현 외, 1993; 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분석결과, 아들의 수가 증가하면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 모두 추가출산의향이 낮아졌으나, 미취업여성집단보다는 취업여성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모와의 동거는 미취업여성의 출산에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 출산에 대한 심리적 압박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동거할 경우 남아선호사상이 더욱 커지는지에 대해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즉, 부모와 동거할 경우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출산에 대한 압박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라는 특정 성별에 대한 압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취업여성의 경우 부모와 동거를 할 경우 추가적인 출산의향이 평균적으로 3.4% 증가하고, 아들이 있을 때의 경우에는 5.1% 감소하였으며 아들이 있으면서 부모와 동거를 할 경우 2.7% 감소하였다. 취업여성의 경우 각각 1.4% 증가, 4.5% 감소,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의 동거가 추가 출산의향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가 아들이라는 특정 성별에 대해 출산 압박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4. 경제적·문화가치관·지역적 변수의 영향 분석

경제적·문화가치관·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표 5>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급률과
 추가 출산의향은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 5> 경제적·문화가치관·지역적 변수의 영향 분석

변수	미취업여성		취업여성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연령	0.075***	(0.005)	0.152***	(0.006)
연령제곱	-0.194***	(0.000)	-0.253***	(0.000)
결혼연령	0.046***	(0.001)	0.043***	(0.001)
경제적 변수				
여성의 교육수준	0.008***	(0.001)	0.014***	(0.001)
남편의 소득	0.005***	(0.002)	-0.003	(0.006)
여성의 소득			0.002	(0.003)
여성 임금근로자 여부			-0.011**	(0.005)
문화가치관 변수				
자녀 수	-0.123***	(0.003)	-0.107***	(0.003)
아들유무	-0.053***	(0.003)	-0.047***	(0.004)
부모와 동거여부	0.015**	(0.007)	0.004	(0.006)
도시여부	-0.013***	(0.005)	-0.016***	(0.006)
지역적 변수				
보육시설 공급률	-0.003***	(0.002)	-0.004**	(0.002)
실업률	-0.001***	(0.002)	-0.005***	(0.002)
N	47,630	47,630	30,008	30,008

주: 1. 추정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2.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 수, 보육시설 공급률, 실업률 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는 표준편차 한 단위 증가했을 때에 대한 값으로 나타냄.

3.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정(+)¹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급률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미취업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은 0.3%,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급률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취업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은 0.4%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보육시설 공급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미하지만 취업여성의 경우 미취업여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취업여성의 경우 일-자녀 양육의 병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낮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여성의 시간의 제약이 완화되고, 시간의 잠재적 비용이 감소하여 출산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궁극적으로 출산의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tolzenberg and Waite, 1984; Kravda, 1996; Del Boca, 2002; Rindfuss, Guilkey, Morgan, Kravdal and Guzzo, 2007). 즉, 양질의 보육시설의 접근성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시간 제약이 완화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취업여성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Stolzenberg and Wait, 1984)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실업률이 증가하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인해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생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약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낮다면 여성은 자녀를 감당할 만한 소비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는 여성의 출산의향을 높이게 된다(Blossfeld, 1987; Hank, 2002; 박상미, 2007). 따라서 지역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므로 추가적인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 반면 지역별 실업률이 낮으면 여성의 노동참가 기회가 더 증가하게 됨에 따라 출산의향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Billy and Moore, 1992).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주 지역의 실업률의 증가는 미취업여성과 취업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효과의 크기는 미취업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기회의 감소가 경제적인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취업여

<표 6> 경제적·문화가치관·지역적 변수의 영향 분석
(취업여부별로 가중치를 부과한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 사용)

변수	미취업여성		취업여성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연령	0.075***	(0.005)	0.152***	(0.006)
연령제곱	-0.194***	(0.000)	-0.225***	(0.000)
결혼연령	0.049***	(0.001)	0.050***	(0.001)
경제적 변수				
여성의 교육수준	0.008***	(0.001)	0.014***	(0.001)
남편의 소득	0.004***	(0.002)	-0.004	(0.006)
여성의 소득			0.005	(0.003)
임금근로자 여부			-0.012**	(0.005)
문화가치관 변수				
자녀 수	-0.127***	(0.003)	-0.113***	(0.003)
아들유무	-0.113***	(0.003)	-0.079***	(0.003)
부모와 동거여부	0.018***	(0.006)	0.006	(0.006)
도시여부	-0.012**	(0.004)	-0.014**	(0.006)
지역적 변수				
보육시설 공급률	0.003*	(0.002)	0.004**	(0.002)
실업률	-0.001***	(0.002)	-0.005*	(0.002)
N	47,630	47,630	30,008	30,008

주: 1. 추정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2.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 수, 보육시설 공급률, 실업률 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는 표준편차 한 단위 증가했을 때에 대한 값으로 나타냄.

3.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성의 경우 남편과 여성 모두에게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경제적인 불안정이 발생하더라도 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미취업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가구 소득이 더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출산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급률이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이유가 보육시설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취업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취업여부별로 가중치를 둔 분석 결과는 <표 5>에서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좀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지역별 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센서스 자료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시군구 단위별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평균 가격에 대한 정보도 구하기 어려운 한계점으로 인해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제 6 장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적 변수, 문화가치관 변수, 지역별 변수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추가 출산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로부터 만 20세부터 40세의 기혼여성 77,638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취업여부에 따라 각 변수들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동거할수록, 지역의 보육시설 공급률이 증가할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반면, 아들의 유무, 자녀의 수, 도시여부, 지역별 실업률의 증가는 추가 출산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는 미취업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 양육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출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률은 추가 출산의향을 미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공급이 여성의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어 출산을 높이는 작용을 할 가능성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별 실업률의 경우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률이 높아질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반면, 아들의 유무, 자녀의 수, 임금근로 여부, 도시여부, 지역별 실업률의 증가는 추가 출산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이면서 임금근로자인 경우 추가 출산의향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취업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해 시간적·물리적인 제약이 더 심화되어 자녀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취업여성이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추가적인 출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률이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여성의 경우 미취

업여성에 비해 다소 크고 통계적 유의성도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 또한 취업여성의 경우 일과 자녀 양육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보육시설 공급의 증가가 여성의 취업과 출산의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별 실업률의 경우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낮아지지만 그 효과가 미취업여성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소득으로 인해 안정적 경제 상황을 가지게 되어 경제적 측면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문화가치관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별 변수가 미취업여성 과 취업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실업률은 추가 출산의향을 낮추며 보육시설 공급률 증가는 미미하지만 추가 출산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학적, 문화가치관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 또한 개인의 출산행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취업 여부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여성은 경제적 변수인 남편의 소득이나 지역별 실업률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취업여성은 자녀 양육에 관련된 변수인 임금근로자 여부, 지역의 보육시설 공급률 등 자녀 양육에 관련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업여성 과 미취업여성 모두 부모와의 동거와 아들유무의 상호작용 항을 통제한 경우 이미 자녀 중 남아가 있는 경우 부모와의 동거가 추가 출산의향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여성 과 취업여성 모두에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남아선호사상이 더 강한 부모세대가 기혼여성에게 아들을 추가적으로 출산하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지역적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확보가 요구되어 횡단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개인별, 지역별 고정효과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

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와의 동거 변수는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친정부모와의 동거인지 시부모와의 동거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추후 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육시설 공급률 변수가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경우 추가 출산의향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며 보육시설의 가격, 질 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의향이 있는 여성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공급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통제하지 못하여 추정치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추후 후속연구에서 상기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Pseudo Panel 모형을 통해 지역별 고정효과를 통제한다면 횡단면 분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점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적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연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을 취업여부별로 집단을 나눠 분석함으로써 취업여부별로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 역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차후 출산장려 정책 수립시 미취업여성과 취업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과 지역별 특성이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취업 여성의 경우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취업여성의 경우 보육시설 확충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취업 여부에 따른 각 인구집단의 특성에 맞게 내실 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Becker, G. S., et al.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and H. G. Lewis (1974). 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UMI.
- Billari, F. C. and H. P. Kohler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 Stud (Camb)* 58(2): 161-176.
- Blau, D. M. and P. K. Robins (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6(2): 287-299.
- Blossfeld, H. P. (1987). "Labor-market entry and the sexual segregation of career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118.
- Brewer, M., et al. (2010). "Does welfare reform affect fertility? Evidence from the UK."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5(1): 245-266.
- Brewster, K. L. and R.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296.
- Cho, L. J., et al. (1982).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cademies.
- Cigno, A. and J. Ermisch (1989). "A microeconomic analysis of the timing of births." *European Economic Review* 33(4): 737-760.
- Davis, K. (1937). "Reproductive institutions and the pressure for popul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29(3): 289-306.
- Davis, K. (1955). "Institutional patterns favoring high fertility in underdeveloped areas." *Biodemography and Social Biology* 2(1): 33-39.
- Del Boca, D. (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s in Ital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3): 549–573.

Ermisch, J. (1990). "European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agai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1): 3–18.

Freedman, R., et al. (1978). "Household composition and extended kinship in Taiwan." *Popul Stud (Camb)* 32(1): 65–80.

Hank, K. (2002). "Regional social contexts and individual fertility decisions: A multilevel analysis of first and second births in Wester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18(3): 281–299.

Hank, K. and M. Kreyenfeld (2003). "A multilevel analysis of child care and women's fertility decisions in Wester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3): 584–596.

Happel, A. P. S., et al. (1984). "An economic analysis of the timing of childbirth." *Popul Stud (Camb)* 38(2): 299–311.

Heckman, J. J. and J. R. Walker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income and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Evidence from Swedish longitudinal data."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411–1441.

Hotz, V. J. and R. A. Miller (1988). "An empirical analysis of life cycle fertility and female labor supply."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91–118.

Larsen, U., et al. (1998). "Fertility and son preference in Korea." *Popul Stud (Camb)* 52(3): 317–325.

Lundholm, M. and H. Ohlsson (1998). "Wages, taxes and publicly provided day car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2): 185–204.

Lundholm, M. and H. Ohlsson (2002). "Who takes care of the children? The quantity–quality model revisited."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3): 455–461.

- Melkersson, M. and D. O. Rooth (2000). "Modeling female fertility using inflated count data model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3(2): 189-203.
- Miller, W. B. and D. J. Pasta (2006). "Behavioral Intentions: Which Ones Predict Fertility Behavior in Married Couple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6): 530-555.
- Park, C. B. and N. H. Cho (1995).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in a low-fertility society: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59-84.
- Presser, H. B. and W. Baldwin (1980). "Child care as a constraint on employment: Prevalence, correlates, and bearing on the work and fertility nexu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02-1213.
- Ribar, D. C. (1992).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Reduced form evid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34-165.
- Rindfuss, R. R., et al. (2007). "Child care availability and first-birth timing in Norway." *Demography* 44(2): 345-372.
- Robinson, W. C. (1963). "Urbanization and fertility: the non-western experience."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41(3): 291-308.
- Robinson, W. C. (1963). "Urbanization and fertility: the non-western experience."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41(3): 291-308.
- Santos Silva, J. and F. Covas (2000). "A modified hurdle model for completed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3(2): 173-188.
- Schoen, R., et al.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90-799.
- Tsay, W.-J. and C. Y. C. Chu (2005). "The pattern of birth spacing during Taiwan's demographic transi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8(2): 323-336.
- Walker, J. R. (1995). "The effect of public policies on recent Swedish

-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8(3): 223-251.
- Weinstein, M., et al. (1990). "Household composition, extended kinship, and reproduction in Taiwan: 1965 - 1985." *Popul Stud (Camb)* 44(2): 217-239.
-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9.
- 김일현, et al. (1990). "남아선호의 결정 요인 및 영향력 분석." *보건사회연구* 1990a00: 56-82.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종백, 유은영 (2010). "기혼여성의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육아정책연구* 4(2): 381
- 김지경 (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3): 91-104.
- 김지경, 조유현 (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6(3): 181-207.
- 김태현, et al. (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편), 한국인구학* 29(1): 1-23.
- 김현숙, et al. (2007).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조세· 재정정책: 출산율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연구결과 요약집*: 31.
- 김현식, 김지연 (2012). "부모동거가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3): 5-32.
- 박상미 (2007). "사회환경과 출산의향: 대도시 기혼부인의추가 자녀 출산 선호." *서울대학교 보건학박사학위논문*.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9-77.
- 서문희 (2010).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이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4(2): 76-95.
- 서미정 (2010). "유자녀 여성의 후속 출산계획에 대한 양육관련 요인의영

- 향." 육아정책연구 4(2): 179-198.
-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 신혜원, et al. (2009). "논문: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서울도시연구 10(2): 33-47.
- 여정성 (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71-83.
- 우석진 (2010).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51-74.
- 유계숙 (2009).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 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69-189.
- 유홍준 (2009). "첫 자녀 출산 후 여성의 취업여부 및 직장복귀에 관한 결정요인." 한국사회 10(1): 183-223.
- 이기영 (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지속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保健社會研究 26(2): 95-140.
- 이성용 (2003). "남아 선호와 출산력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26(1): 31-5
- 이용복, 이소희 (2004).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2): 95-113.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이정원 (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합리적-가치적 선택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경, 옥선화 (2009). "연구논문: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0(3): 59-83.
- 정혜은, 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51-168.

윤소영 (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3(2).

Abstract

Additional birth intention on married women depending on employment status

– analysis of the economical, cultural and
regional variables–

Jeon Ji Hye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economical, cultur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additional 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in Korea. 76,385 married women between age 20 to 40 are used from 2005 Korean census data are used in probit regression model.

The paper finds that regional variables such as public day-care supply and regional unemployment affect birth intention as well as econom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public day-care supply significantly raise birth intention for both employed and unmenployed

while regional unemployment rate lowers birth intention for them.

Additionally, the magnitude of the effect from the above variables on birth intention are different depending on employment status. Economics variables such as income of their husband or regional unemployment rate have stronger effect on birth intention of unemployed women than that of employed women.. On the other hand,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raising children (daycare supply or employment type) have greater effect on the birth intention of employed women than that of unemployed women.

This study empirically shows that variables affecting birth intention differ depending on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have significant effect on birth intention. Therefore, when adopting a policy regarding raising fertility rate, it would be better to provide different policies depending on employment status and the fact that regional variables do affect birth intention much be taken into account before such policy is made.

student number: 2010-20190

keywords: fertility intention, married women, employment, local characteristic, Census